# 43년 만에 발견된 '오월 일기' 5·18기록관 기증

**이윤희 미주지역 5·18동지회장**

**80년 5월 시민군 활약 내용 담아**
**"실제 경험자의 기록, 역사적 사료"**

"후련하면서도 뭉클하네요. 이 일기가 오늘날 오월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담은 일기<본보 12월8일 5면>가 43년 만에 발견돼 12일 5·18 기록관에 기증됐다.

기증의 주인공은 이윤희 미주지역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장. 그는 오월항쟁 당시 대입을 위해 고향 나주서 공부하다, 우연히 청년 시위대가 몰던 버스에 타면서 시민군으로 활약하게 됐다. 이씨가 쓴 일기에는 항쟁에 나선 21일 첫날의 상황이 적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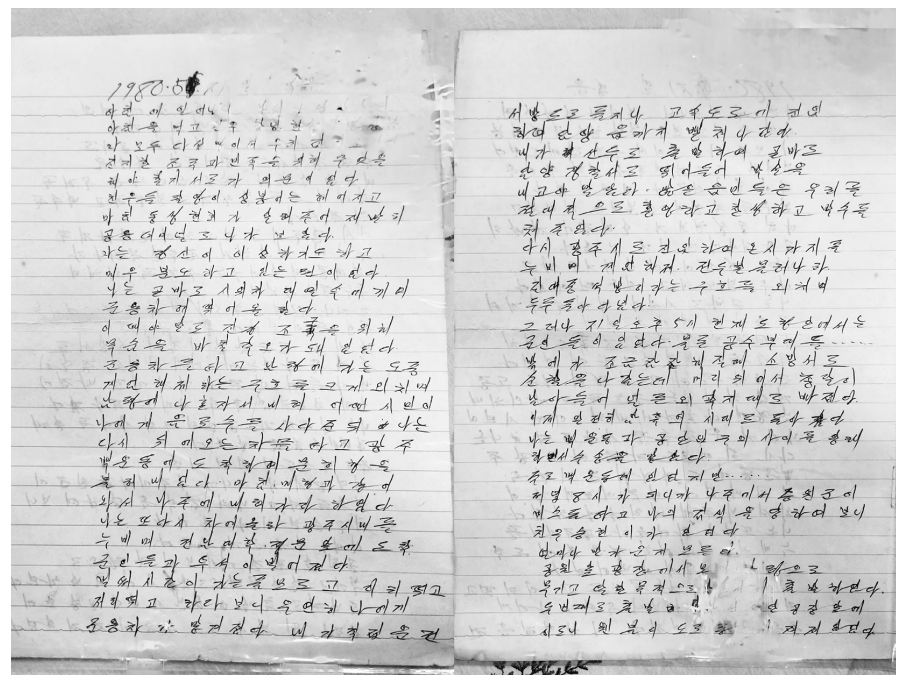
'전남대학 정문 앞에 도착, 군인들과 투석이 벌어졌다', '저녁 8시 나주에서 온 증원군 버스에 친구 승현이가 있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 '버스 속에서 사람 살려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등 생생한 현장이 담겼다.

12일 홍인화 5·18기록관장(왼쪽)과 이윤희 5·18동지회장이 기증물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록관 관계자에게 떨리는 손으로 기증물을 건네던 이씨는 '오월 당시가 생각난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군용차에 뛰어오르던 모습이 떠오른다. 군인들과 투석을 하고, 27일 계엄군 진입 직전 도청을 빠져나간 것도 생생하다"며 "이를 증명할 거리들을 두 손으로 들고 있으니 '혹여 잃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 항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그는 항쟁 기간 매일 일기를 써 내려갔다. 기증한 '21일 일기'는 22일 새벽 계엄군을 피해 지인의 집 옥상에 올라가 작성했다. 나머지 일기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분실 등으로 존재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



이윤희 미주지역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장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작성했던 일기.

이씨는 "항쟁이 끝난 후 2006년 캐나다에 이민했다. '오월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했다. 그 사이 어머니가 방을 정리하면서 여러 증거물이 사라진 것 같다. 최근 고서를 뒤지다 우연히 이 한 점을 발견하곤 뛸 듯이 기뻤다"고 밝혔다.

이씨는 일기뿐만 아니라, 과거 한 신문에 실린 5·18 당시 사진도 기증했다. 이 기록물에는 군인들과 시위대가 항쟁 현장에서 대치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신문사 사명 등은 추후 조사로 밝혀낼 예정이다.

5·18 기록관은 이씨가 건넨 기증물을 검토한 뒤 전시관에 비치할 예정이다. 기증 확인이 완료되면 이씨가 기록관에 전달한 기증물은 4점으로 늘어난다.

이씨는 지난 2018년부터 △400여 장의 '5·18관련 나주지역 공문서' △미국 광주항쟁 지지 유학생들이 입은 '광주 티셔츠'를 기증한 바 있다.

홍인화 5·18기록관장은 "실질적 경험자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5·18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몹시 귀감이 되는 일"이라며 "기증품의 가치 등은 차후 문제다. 역사적 사료로서 이미 큰 역할을 한다. 용기 내 찾아준 이씨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5·18 기록관은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1980년 5월 항쟁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관하는 곳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시작이었던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에 위치해 있다.

글·사진=정성현·나주=박송엽 기자

## 목포 한 사립고 재시험 치렀다가 취소

**'통합과학' 출제유형 비중 달라**
**도교육청 "재시험 요건 안돼"**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시험을 치렀다가 다시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목포의 한 사립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통합과학 과목에서 객관식 3문제만 다시 재시험을 진행했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 6일 1학년을 대상으로 통합과학 과목 기말고사를 치르고 난 뒤 출제유형의 비중(선택형 62.5% 단답형 25% 단답형 12.5%)이 사전에 제출된 평가계획(선택형 80% 서술형 20%)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5일 뒤인 11일 재시험을 치렀다.

이에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전남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출제유형의 비중 변경이 재시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고교는 재시험 당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시험을 무효로 하고 지난 6일에 치러진 본 시험 점수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재시험 요건은 △출제문항에 오류가 있거나 상식 이하로 난이도가 낮은 경우 △전년도 기출이나 참고서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된 경우 △학생들에게 출제 문항의 상당한 정보를 알려준 경우다.

학교 측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재시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전남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라 원래 시험 성적을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 '광주 중앙공원' 전현직 공무원들 2심도 무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법원 "부당 지시 등 증거 부족"**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61) 전 감사위원장, 시청 공무원 양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생태환경국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호반)의 이의 제기를 받아주고 특정(표적)감사를 벌인 데다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제외해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고위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제안 심사 위원회에 특정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해 감사위·심사위 권한·업무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배점이 잘못되거나 평가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부적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모두 바뀌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부시장, 윤 전 감사위원장, 이 전 국장, 양씨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은 허위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결과 보고서에 넣도록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부당한 목적으로 감사위에 개입하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